

「헐벗은 삶」과 정치의 붕괴

- 잃어버린 전후 70년, 그리고 50년 -

마키노 에이지*
aas15130@par.odn.ne.jp

<目次>

- | | |
|--------------------------|-----------------------|
| 1. 문제제기 : 전후 일본이 잃어버린 것 | 5. 한일관계의 진정한 정상화를 위하여 |
| 2. 「7·1 쿠데타」의 귀추 | -미국 예외주의의 불식- |
| 3. 「정치적 붕괴」와 「헐벗은 삶」의 노정 | 6. 결론 |
| 4. 정치의 「올바른 삶」과 「헐벗은 삶」 | |

主題語: 올바른 삶(a qualified life), 헐벗은 삶(a state of bare life), 쿠데타(the fundamental policy change), 미국 예외주의(American exceptionalism), 정치적 붕괴(political collapse)

1. 문제제기 : 전후 일본이 잃어버린 것

본고의 목적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다. 첫째, 제2차 세계대전 패전으로부터 일본은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취해 왔는가. 달리 말하자면, 전후 일본은 무엇을 상실했는가. 둘째, 전후 일본은 국제관계, 특히 한일국교정상화에 성공했는가. 달리 말하자면, 일본은 국제적·국내적으로 평화 실현에 노력하며, 법적 정의를 실현했는가. 셋째, 일본 사회에 살고 있는 시민은 「올바른 삶(善き生)」(bios)을 향수했는가. 넷째, 현대 사회가 추진하고 있는 과학 기술은 국내외인의 「올바른 삶」에 상응하는 「희망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었는가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상과 같은 질문에 대한 필자의 대답은 모두 부정적이다. 첫째로, 현재 일본에서는 평화헌법에 적합한 민주적인 정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민은 노력을 통해서 획득한 민주주의·입헌정치를 상실했다. 둘째로, 전후 70년,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이하면서 한일관계는 최악의 상황에 빠져 있다. 셋째로, 일본의 정치는 붕괴상태에 빠져 있고, 「헐벗은 삶(剥き出しの生)」(zoe)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넷째로, 8월 14일의 수상 담화

* 호세이대학 철학과 교수

에 대한 평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일본은 미국을 예외로 국제적 불신감을 강화시키고 있고 동아시아로부터 고립당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정치의 붕괴를 막고, 국민이 상실한 것을 회복하며, 이웃 국가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을까.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절실한 문제에 대한 고찰을 시도한다. 첫째로, 「7·1 쿠데타」 이후, 일본이 직면하고 있는 정치적 문제를 인간의 「삶」의 양의성과 관련해서 해독한다. 둘째로, 현대 정치의 붕괴와 그에 따라 발생한 「혈벗은 삶」의 여러 문제들을 밝히고자 한다. 셋째로, 필자는 「7·1 쿠데타」가 상징하는 일본의 「정치 붕괴」에 의해서 적나라하게 노출된 「혈벗은 삶」의 상황에 대해서, 정치의 본래 모습을 탐구하기 위한 「올바른 삶」의 의의를 규명한다. 넷째로, 「정치 붕괴」는 아베정권이 목표로 하는 분쟁의 해결 방법이 「자율형 무기」의 활용을 촉진시키고, 「7·1 쿠데타」의 최종 국면으로서 「혈벗은 삶」에 의한 인간의 「올바른 삶」을 위기에 노출시키는 리스크를 고찰한다. 마지막으로, 전후 정치의 붕괴에 가담한 「미국 예외주의」의 공죄를 지적하고, 바람직한 시대의 도래를 위한 방향성을 전망하고자 한다.

2. 「7·1 쿠데타」의 귀추

먼저, 「7·1 쿠데타」의 진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2015년 7월 15일에 일본정부는 「안보관련법안」, 별칭 「전쟁법안」을 중의원에서 강행 체결했다. 정치학자 고바야시 마사야(小林正弥) 지바대학 교수는 동 사태를 「헌법 쿠데타」라고 부르며 정부를 비판했다²⁾. 하지만 동 쿠데타는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쿠데타, 즉 무력에 의한 기습공격으로 정권을 탈취하

1) 「올바른 삶」(bios)과 「혈벗은 삶」(zoe)의 구분에 대해서는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의 『인간의 조건』(The Human Condition, Chicago/London 1958)을 토대로 하고 있지만, 본고에서는 동 견해를 소개한 조르조 아감벤의 삶에 대한 두 가지 구분을 따르고 있다. 아렌트는 전체주의 지배의 실험장으로 타락한 강제 수용소가 「혈벗은 삶」의 공간이라고 파악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혈벗은 삶」이란 정치에 의해서 법적 보호의 울타리 밖으로 내던져진 인간 삶의 모습을 의미한다. 다만, 필자는 아감벤의 견해를 전면적으로 긍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본고에서는 아렌트가 주장하는 본래의 정치가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올바른 삶」이 아니라, 약자를 소외하고 이질적 타자를 폭력적으로 배제하는 현 정권이 「혈벗은 삶」을 적나라하게 노출시킨 「7·1 쿠데타」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Cf. Giorgio Agamben, Homo Sacer, Torino, 1995. 高桑和己 訳(2003.10) 『ホモ・サケル』以文社, pp.18-20)

2) WebRonza, 2005년 7월 16일. 2015년 7월 28일 『朝日新聞 DIGITAL』은 204명의 일본 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헌법학자가 「안보관련법안」의 강행 체결에 항의하며 그 폐안을 요구했다. 법안 반대의 주된 이유는 첫째, 법안 책정에 이르는 절차가 입헌주의, 국민주권, 의회제 민주주의에 반한다는 것. 둘째, 법안의 내용이 헌법 9조 그 밖의 헌법 규범에 반하기 때문이었다. 이와 같은 논점은 모두 본문에서 필자가 기술한 내용과 일치하지만, 「7·1 쿠데타」설과 관련된 심각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는 군사 쿠데타와는 다르다. 따라서 「안보관련법안」을 중의원에서 강행 채결한 것이 「헌법 쿠데타」라고 비판하는 주장은 일반 대중들에게는 이해하기 힘들다. 필자의 견해에 따르면 동 쿠데타는 정부 최초의 헌법 위반의 폭거가 아니라, 헌법주의에 반하는 일련의 쿠데타 집대성으로 이해해야 한다. 8월 27일, 전 최고재판소 판사와 전 내각법제국 장관들을 포함한 다수의 변호사 등, 법조계의 중진과 100여명을 넘는 대학 대표가 한곳에 모여 「안보법안」을 위헌이고, 즉각 폐안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아베정권은 다수의 여론을 무시하고 이번 국회에서 「안보법안」을 성립시켰다.

사실, 작년 7월 1일에 일본 정부는 현재의 헌법학자 95%가 위헌이라고 판정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인정하는 각의결정을 강행했다. 이것은 일본국 헌법 제9조에 기초한 역대 내각이 준수해 온 개별적 자위권을 뛰어넘은 「해석개헌」에 의한 「법학적 쿠데타」이며, 명백한 「법의 파괴」이다. 이점에 대해서는 헌법학자 이시카와 겐지(石川健治) 도쿄대학 교수도 지적했다. 이시카와 교수에 의하면, 「정부가 국민이나 외국에 대해서 약속한 것을 깨기 위해서는 보다 상위의 규범을 원칙으로 하는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이 아니면 안 됩니다. 국민투표나 그것에 상응하는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반적인 각의 결정으로 정해버렸습니다. 법학적으로는 『법의 파괴』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쿠데타란 『법의 파괴』의 한 종류인 것입니다.³⁾

여기에서 필자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의원에서서의 강행채결에 의한 「헌법 쿠데타」가 일어나기 1년여 전에, 이미 각의결정에 의한 「법학적인 쿠데타」가 일어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둘째, 이와 같은 쿠데타가 자위대의 해외 파병의 길을 열었을 뿐 아니라, 군비력의 강화와 군사 산업화 및 무기 수출의 추진, 핵개발과 연동된 원자력발전소 재가동, 군사산업이나 방위성과 대학과의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경향을 강화시켜, 해외의 군사기업에 대한 매수를 인정하게 되었다. 평화헌법에 반하는 중요한 변경은 「법률개정은 하지 않고, 해석을 바꾸는 것으로 현재의 원칙 금지 규제를 변경할」⁴⁾방침이다. 셋째, 「정치적 붕괴」는 일본 사회의 지역 붕괴, 노동자의 고용차별과 연금제도의 실질적인 붕괴, 일본은행의 독립성 붕괴 등과도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넷째, 이와 같은 「정치적 붕괴」는 최근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는 표현 자유의 제한이나 매스컴에 의한 권력 폭주의 감시와 체크 기능의 붕괴와도 연동되어 있다. 다섯째, 최근 문부과학성이 추진하고 있는 대학의 인문사회과학계 강좌의 축소 재편 등의 문교정책과도 연동되어 있다는 점이다. 일본의 많은 학자·연구자는 대학의 조직 재편의 동향이 코스트주의와 슈퍼·글로벌화의 방침에 따른 문교정책의 레벨에서 비판하고 있지만, 일련의 쿠데타가 노리는 목적이나 진상을 아직 충분히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다. 모든 일본

3) 『東京新聞』2015년 7월 22일, 【私説・論說室】

4) 『東京新聞』2015년 8월 2일, 1면 기사

정치는 입헌주의에 기초한 민주적 정치 시스템을 붕괴로 이끌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극히 위태로운 생활을 시민들에게 강요하는 사태를 초래하고 있고, 달리 말하자면 현재 일본의 정치적 상황은 「혈벗은 삶」을 용인하는 사회로 변모를 해 왔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3. 「정치 붕괴」와 「혈벗은 삶」의 노정

패전 후 70년을 맞이해서 일본사회에서는 「혈벗은 삶」이 여러 곳에서 노정되어 왔다. 첫째, 상기의 「법적 쿠데타」이 절차상·내용상으로도 정의에 반하는 이유를 확인해 두도록 하자. 올해, 제2차 세계대전 패전 70주년을 맞이하여, 군국주의에 대한 반성이 높아지기는커녕, 오히려 새로운 전쟁의 불씨가 확산되고 있다.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이하여, 양국 간에는 정상화를 곤란하게 만드는 상황이 새롭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들은 아베 수상에 의한 헌법의 해석 개정, 그리고 이를 통한 군비 강화와 타국에 대한 군대 파견의 정책 실현과 불가분한 관계에 있다.

일본 정부는 6월 4일, 국회심의회의 집단적 자위권의 정당성을 국민에게 보여 주기 위해서, 안보법제심사회에서 3명의 헌법학자의 의견을 참고인으로 해서 청취한 결과, 전원으로부터 집단적 자위권을 포함한 정부의 해석 변경은 헌법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그러나 정부는 전문가를 포함한 의견이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려는 의지가 없었다. 더구나, 민주당이 기대했던 헌법학자 하세베 야스오(長谷部泰男) 와세다대학 교수는 자위대 합헌론자임에도 불구하고, 안보법제심사회에서는 집단적 자위권을 포함한 정부의 해석 변경은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제98조는 「이 헌법은 국가의 최고 법규이며, 그 조항에 반하는 법률은(중략)그 효력을 갖지 않는다」라고 명기되어 있는 이상, 헌법에 위반하는 법률을 만들고자 하는 정부의 논리적 파탄은 명백하다. 여기에도 일본 정부에 의한 해외 파병과 호전국가로 변모해가는 「혈벗은 삶」을 소비하려는 의도가 적나라하게 노출되어 있다.

둘째, 권력에 의한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억압에 대해서, 사실 관계를 지적해 두고자 한다. 6월 25일에는 자민당 젊은 의원이 주최하는 「문화예술간담회」에서 주최자 의원들과의 담화에서, 작가 하쿠타 나오키(百田尚樹)가 「침략전쟁은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개헌해야 한다」, 정부의 방침에 반대하는 보도를 하고 있는 「오키나와의 두 신문은 없애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이것은 명백히 언론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이며, 『오키나와 타임즈(沖縄タイムス)』와 『류큐신보(琉球新報)』를 포함한 다방면에서 심한 비판이 일어났다. 아베 수상을

추종하는 의원과 친구 하쿠타는 본인의 생각과 다른 마스크를 없애고, 그 구체적인 안을 제시한다고 하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발언을 반복하고 있고, 중의원에서 강행 채결이라고 하는 폭거에도 가담했다. 여기에도 「혈벗은 삶」이 정치 본래의 역할과는 반대되는 형태로 적나라하게 노출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태는 과거 전후 정치에서는 볼 수 없었던 것이고, 동 사태는 「정치의 열화(劣化)」라는 말로도 표현 불가능하다. 오히려 전통적인 국가상이 추후 해 온 「올바른 삶」과 모순·대립되는 「혈벗은 삶」이 지금의 정치 세계에서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고, 민주정치를 붕괴시키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셋째, 정부와 재계의 연계에 의한 위협은 일본경제신문사가 영국의 유력 경제지 『파이낸셜 타임스(FT)』를 매수한 사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일본경제신문의 기타 즈네오(喜多恒雄) 회장에 의하면, 동 매수의 목적은 성장을 계속해 가기 위해서는 디지털과 글로벌을 중심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되며, 「FT」를 매수함으로써 글로벌한 보도를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⁵⁾. 하지만, 일본경제신문의 FT 매수의 진정한 의도는 FT의 편집권에 대한 독립성을 빼앗고, 일본정부와 일본경제에게 유리한 정보를 세계에 발신하려는 전략에 있다. 이것 또한 「7·1 쿠데타」를 정당화하기 위한 선전전의 세계침략의 표출이며, 아베정권과 연계된 기업전략의 일환인 것이다.

넷째, 빈곤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경제적 징병제」 정책이 교묘하게 실현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7월 30일, 참의원에서도 야당으로부터 징병제를 의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아베 수상은 징병제를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징병제에 대한 포석이 깔려 있다. 문부과학성은 2014년 8월 말, 대학생의 경제 지원에 대한 보고서를 정리했다. 『도쿄신문(東京新聞)』은 졸업 후에 취직하지 않고 장학금 상환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유식자회의(有識者會議) 멤버의 한 명이 「방위성에서 인턴십(취업체험)을 시키면 어떠한가」라고 발언한 사실을 보도하며, 젊은 빈곤층을 군인의 길로 부추기는 것은 「경제적 징병제」가 아니냐는 염려를 표명했다⁶⁾. 더욱이 노동자의 노출된 「혈벗은 삶」의 단적인 예로는 「노동자 파견법」의 개정 문제가 있다. 이것 역시 「전쟁법안」에 대한 논의의 그늘에 가려져 있지만, 분명히 「법적 쿠데타」의 한 측면의 표출이다. 동 법안의 취지는 노동자 고용과 파견에 대해서 고용주 측의 이익에 맞는 일회용 합법화이지만,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다.

다섯째, 동 「노동자 파견법」의 개정이 실현되면,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살고 있는 젊은이가

5) 『NHK NEWS web』2015년 7월 28일.

6) 『東京新聞』2014년 9월 3일, 特報部 기사. 사실, 이와 같은 사례는 이미 미국에서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일회용 노동력의 싼 임금을 버티지 못하고, 결국 자위대에 입대하지 않을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는 것에 끝나지 않는다. 여기에도 「법적 쿠데타」의 피해자가 「혈벗은 삶」의 폭력성을 발휘하는 군대의 침병으로서 가해자로 전환된다. 하지만, 본래 정치의 역할은 국민의 안심·안전을 지키고, 국제사회와 협조하여 세계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에 있다. 일본국 헌법은 그것을 위해서 존재한다. 하지만, 현재의 정치 상황은 국민의 「올바른 삶」(bios)을 지키는 것보다도, 헌법학자들이 위헌이라고 판정한 집단적 자위권을 포함한 「안보관련법안」의 실현에 있다. 이것은 일본 국민뿐만 아니라 이웃국가 한국·중국을 비롯한 멀리 떨어진 곳에 살고 있는 타국민을 「혈벗은 삶」에 노출시키는 사태를 초래했다고 볼 수 있다.

여섯째, 필자가 위기감을 갖는 것은 이와 같은 정치 비판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상황이 일반 사회뿐 아니라, 대학에서도 만연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또 한편으로 시민 사회에서는 헤이트 스피치가 확산되면서 제일 한국인·조선인·중국인에 대한 인격을 부정하는 「재특회」의 「혈벗은 삶」을 상징하는 헌법 위반 활동은 현재, 아이누 민족과 후쿠시마 현민, 생활보호대상가정에 대해서도 공격을 칼날을 들이대고 있고, 정부도 이와 같은 폭력을 법 제도에 따라서 규제하지 않고, 방치시키고 있다⁷⁾. 또한, 국립대학의 국기계양에 대한 강요와 수업 중에 반정부적인 발언을 한 교원을 징계 처분하는 등의 권력의 폭력성은 멈출 줄을 모른다. 「혈벗은 삶」이 학문의 영역에도 적나라하게 노출되고 있다. 인문 사회과학 중시 정책은 그 단적인 표출이다. 「올바른 삶」을 말하고, 역사의 기억을 말하며, 헌법의 준수를 주장하는 학자는 인문사회과학의 담당자이다. 비판정신을 학문의 영역에서 헌법학자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비판과 다른 의견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는 학문 연구를 삼켜버리려고 하는 「혈벗은 삶」의 권력에 의한 「약육강식」이 대학을 뒤엎기 시작하고 있다. 대학인은 이러한 상황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4. 정치의 「올바른 삶」과 「혈벗은 삶」

다음으로는 정부가 집단적 자위권을 실현시켜야 한다고 하며, 그 이유로 꼽은 「국민의 생명과 생활을 지키기 위해」라고 하는 경우의 「국민의 생명과 생활」이라는 말의 진의에 대해

7) 「재특회」를 중심으로 한 헤이트 스피치의 전국적 규모의 확산 상태, 또는 제일한국·조선인·중국인에 대한 인격을 부정하는 「혈벗은 삶」의 야만적 현상에 대해서는 「多文化關係学会・福島大会」(2014년 11월 9일)에서 필자의 기조강연(본 학회 홈페이지에서 전문 공개 중)을 참조하길 바란다. 더욱이, 여당은 2015년 8월 27일 시점에서 헤이트 스피치의 규제 법안을 본 국회에서 체결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서 고찰하도록 한다.

첫째로, 일본의 많은 시민들은 젊은이를 포함해서 자신들의 「올바른 삶」을 위해서 집단적 자위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고용 대책과 고령화 대책, 빈부격차의 확대를 바로잡을 수 있는 적절한 정책을 바라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야당 정치가, 국민의 대부분이 정치가 말하는 「국민의 생명과 생활」이라는 말의 의미를 오해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생활」이라고 하는 말의 진정한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다. 이것은 「생명과 삶」의 양의성을 분절화해서, 역사의 망각으로부터 인간의 「삶(bios)의 기억을 구제하는 것에 있다. 일본국 헌법은 국민의 생존권과 문화적 생활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일련의 「법적 쿠데타」의 프로세스에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여러 권리를 빼앗고, 인간으로서 살아가는(bios) 권리, 「희망의 권리」⁸⁾를 빼앗기고 있다. 예를 들면, 자위대가 해외에서 후방지원을 수행하다가 포로로 잡혔다고 해도, 자위대원은 포로로 취급받지 못하고, 타국의 형법에 의해서 범죄자로 처벌받게 된다⁹⁾. 일본의 자위대는 「제네바조약(Geneva conventions)」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되어, 테러리스트 대우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다른 나라의 국군 병사에게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다.

둘째로, 정부 주도의 과학기술의 진보 발전은 생활자의 삶의 모습을 급속도로 변화시키고 있다. 실제로 과학기술의 「눈부신 참혹함」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때의 제어 불가능한 사태에서 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올해, 무더위 속에서도 원전에 의한 전력은 제로 상태에서 전력이 부족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정권은 원전 재가동을 강행했다. 원자력의 평화 이용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말을 슬로건으로 추진된 원자력발전정책의 배후에는 원자력의 군사 목적에 대한 전용이라는 숨은 의도가 있기 때문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탈원전과 대립하는 형태로 공론화된 것은 군사 목적으로 전용 가능하기 때문이야말로, 원전은 추진해야 한다고 하는 핵무장론의 재등장이다. 핵무장론의 표면적인 주장은 원전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적절히 강구한다면, 원전을 추진하는 것은 국책상 바람직하며, 많은 외국에 적극적으로 원전 건설 기술을 수출해야 한다고 하는 점에 있다.

8) 인간으로서 살아가는(bios) 권리, 「희망의 권리」에 대해서는 牧野英二(2015.7) 「希望の原理としての最高善」(日本カント協会編『日本カント研究』No.16, 知泉書館, pp.23-37)을 참조하길 바란다.

9) 『東京新聞』(2015년 8월 24일)에 의하면, 7월 1일의 중의원 평화안전법제특별위원회에서 야당 측의 질문에 대해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대신은 「제네바 제조약상의 포로란 분쟁 당사국의 군대 구성원 등으로 적의 권력내로 포함된 경우를 말한다. 자위대의 후방지원은 무력행사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행되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답변했다. 즉, 후방지원을 수행하는 자위대는 포로의 인도적 대우를 의무화한 제네바조약의 「포로」에 해당되지 않으며, 체포한 나라의 법률에 의해 재판될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한다 시게루(半田滋) 논설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자위대에게 군대와 같은 활동을 시키려고 하는 [안보]법안 자체에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아베수상의 기본 정책이기도 하다. 이 정책은 전후 일본 정권을 이끌어 온 자유민주당의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수상 시절에 실현되었다. 나카소네 전 수상은 일찍이 일본의 재군비와 핵무장을 주장한 인물이다. 원전 건설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여론 만들기에 성공한 나카소네 전 수상에 의해서 일본은 미국의 허락 하에, 핵무기에 사용되는 플루토늄을 대량 보유하는 나라가 되었다¹⁰⁾. 이와 같은 핵무장론이 전쟁 당시의 원폭개발에 관여한 「후쿠시마의 기억」과 불가분한 「역사의 기억」을 상기시켰다. 원자력의 평화 이용, 에너지 기본 계획이라는 말은 비핵보유 12개 나라에 의한 「히로시마선언」(2014년4월12일)과 함께 이와 같은 사실을 은폐하고, 간단하게 군사상의 약자가 강자로 변모하기 위한 최강의 폭력 장치를 손에 넣는 것을 가능케 한다.

셋째로, 더욱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일본정부의 문교정책에 의한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축소·재편이 추진되는 한편, 정부와 산업계, 그리고 대학에서는 로봇 개발에 방대한 개발비를 투입되고 있다. 매스컴 등을 통해, 인간에게 로봇의 존재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있다. 물론, 노동 현장에서의 가혹하고 위험한 작업을 인간을 대신해서 수행하는 산업형 로봇은 최근에는 의료와 간병 현장에서도 활약하고 있다. 그 때문에 「인간과 공생하는 로봇 개발」이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에도 많은 사람들은 의문을 갖지 않고, 공감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¹¹⁾.

그러나 현실은 가속화하고 있는 로봇 개발의 이면에서 무장형 살인 로봇과 같은 「자율형 무기」의 위험성과 그것에 대한 대책도 요구되고 있다. 동 분야에서는 고액의 공적 연구비가 투입되고 있고, 이미 위험성을 경고하고 천체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와 언어학자 노엄 촘스키 등이 서명한 서간에서 「주요한 군사대국에서 AI 무기 개발을 추진하는 나라가 있다면, 세계적으로 개발 경쟁이 일어나는 것을 불가피한 상황이며, 이와 같은 기술 진보의 결말은 분명하다. 자율형 무기는 내일의 칼라슈니코프총(자동소총)이 된다」라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자율형 무기의 대비는 수 년 후가 될지 모른다고 경고하고 있다¹²⁾. 실제로 「적십자국제위원회(ICRC)」에서도 2014년 5월의 보고서 안에서 국제인도법의 관점에서 자율형 무기 개발에

10) 핵확산금지조약(NPT)의 체제하에서 핵연료 재사용이 승인된 국가는 유엔안보이사국의 상임이사국을 제외하면 일본뿐이다. 1987년 9월, 일미수뇌회담에서 나카소네 수상은 레이건 대통령에게 일미원자력 협정을 둘러싼 개정을 요구해서 그 의도를 관철시켰다. 그 결과, 일본은 2018년까지 플루토늄을 대량으로 보유할 자격을 얻게 되었다(『朝日新聞』2011년7월21일). 하지만 아베정권의 재군비화를 염려하는 오바마 대통령은 2014년에 일본의 플루토늄 보유에 제한을 두어야 한다는 코멘트를 발표했다. 2014년 4월 13일 『朝日新聞』에 의하면, 일본은 수 천 발의 핵무기에 상당하는 플루토늄 44톤을 보유하고 있다. 실제로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을 제조하려고 하면, 4000발 이상이 가능하다고 한다.

11) 예를 들면, 만화나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철완 아톰」이라고 하는 인형 로봇에 대한 친근감은 그 선구적인 형태이다.

12) The Wall Street Journal.28.07.2015.

염려를 드러내고 있다¹³⁾.

「인간과 공생하는 로봇 개발」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말의 배후에 「혈벗은 삶」의 폭주는 이미 시작되고 있다. 일본은 로봇 선진국이라고도 불리지만, 자율형 무기의 개발 선진국이기도 하다. 동 프로젝트에는 「7·1 쿠데타」를 지탱하는 첨단 기술의 성과가 보기 좋게 결실을 맺고 있다. 여기에도 마음과 양심은 무용하고, 헌법과 인도법 그리고 인륜에 반하는 규범은 무용하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살인 무기의 효율성과 살상 능력의 성능뿐이다. 아베정권이 2014년 4월 1일, 무기 수출을 금지하는 3원칙(여기에도 미국은 예외였다)을 철폐하고, 「방위장비이전3원칙」을 각의 결정한 이유는 이것을 노리고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일본정부에 의한 쿠데타는 자민당·아베정권에 의한 「전후 70년의 총결산」이며, 그 배후에는 미국의 「예외주의(American exceptionalism)」¹⁴⁾에 의한 영향이 있다. 그것은 과거 한일국교정상화 교섭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한일관계에 있어서도 큰 부의 유산의 원흉이 되었다.

5. 한일관계의 진정한 정상화를 위하여-미국 예외주의의 불식-

한일 양국은 1965년 6월 22일에 기본조약을 체결한 이래, 올해로 50주년을 맞이했다. 하지만 양국은 국교정상화의 행보 속에서 최악의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양국민은 관계개선을 바라고 있고, 많은 외국들도 현재의 상태를 우려하며 한일정상의 직접 대화의 필요성을 호소하고 있다. 한일 학자 사이에서도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강한 위기감을 공유하고 있다.

2015년 5월, 한국에서 개최된 국제학술 심포지엄에서 한국의 법학자는 「한일 과거청산, 지금 무엇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문제제기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제시했다¹⁵⁾.

13) Cf. Report of the ICRC Expert Meeting on ‘Autonomous weapon systems: technical, military, legal and humanitarian aspects’, 26-28 March 2014, Geneva 9 May 2014.

14) 植村泰三(2012)「アメリカ例外主義に関する一考察—キリスト教とアメリカ史の視点から」『早稲田大学法学会編』87권 3호, p.257ff)를 참조. 본 논문에서는 우에무라의 논문이 분석하지 않고 있는 전후 70년간의 정치적 레벨에 나타난 미국 중심주의와 「팍스·아메리카나(Pax Americana)」를 추진한 특권적 미국 예외주의에 착목해서 고찰했다. 일미지위협정에 따라 일본 국내의 미군기지에 있는 미국병사의 사고·범죄 관련 법적 지위는 사실상 일본이 조사권과 재판권 등의 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치외 법권 상태이다. 이와 같은 불평등협정은 1960년에 체결된 이후 개정되지 않고 있고, 기지 주변 주민과 지자체의 오랜 요청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 역시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지 않다. 여기에도 미국 예외주의의 폐해를 찾아볼 수 있다.

15) 김창록(2015.5.9)「한일 과거청산, 지금 무엇이 필요한가?-‘법적’인 관점에서의 접근」『한국일본근대학회 제31회 국제학술대회요지집』 pp.16-21) 참조. 다만, 지정토론자로 참가한 필자의 질문과 응답은 구두로

첫째, 양국 견해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일본이 한국·조선 반도를 식민지 지배를 했는지에 대한 인식의 차이와 보상의 유무에 있다. 둘째, 기본조약 체결에 이르기까지의 프로세스와 조약의 내용 및 해석의 차이도 그곳에 수렴된다. 셋째, 1965년 체제는 무엇을 해결했는가. 그리고 결론에 대해서 동 발표자는 ①한국은 기본조약이 전쟁책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②한편, 일본은 기본조약이 전쟁책임 문제를 해결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③법적으로도 도의적으로도 노동자의 강제연행, 종군위안부 등의 개인보상과 청구권문제, 영토문제, 찬탈당한 문화재의 반환문제 등을 청산하지 않았다는 문제가 발생했다. 따라서 발표자는 ④그러한 문제를 남긴 이유와 과거를 청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제를 제시했다.

필자에 의한 응답과 해결의 실마리는 한국의 법학자가 언급하지 않은 두 가지 점에 집중되었다. 첫째, 기본조약 체결까지의 한일교섭의 중개 역할을 한 미국의 역할을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한일국교정상화 교섭은 미국이 시종일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동서 냉전과 베트남 전쟁의 악화를 우려해서 기존의 무배상주의에서 배상주의로 대일정책을 전환시켰다. 그것은 한국 입장에서 보면 매우 불충분한 배상안이었고, 일본의 경제부흥 중심의 대일정책에 의한 한국과의 교섭에 유리한 측면이 있었다. 미국은 한국 국민의 입장을 무시한 채, 국가적 보상의 실현에 따른 한일교섭 조기타결을 위해 노골적으로 개입한 것이다.

둘째, 미국에 의한 카이로선언과 포츠담선언 이행 절차에 따른 문제점이다. 일본의 영토문제나 재군비의 포기과 관련된 문제는 1943년 11월 27일에 열린 카이로선언에 포함되어 있고, 포츠담선언에서도 계승되었다. 결과적으로 포츠담선언을 수락한 일본정부는 영토문제, 배상문제를 이행할 의무를 지게 되었지만, 두 선언 책정에 관여한 미국의 자의적인 정책변경에 따라, 또는 일본정부의 한국합병에 대한 유리한 법해석을 통해 국교정상화를 실현시켜야 하는 기본조약에서도 군인·군속·노무자로 소집·징용된 자의 유가족에게 지불된 개인보상금은 사망자 한 명 당 30만원으로, 무상협력금 총액의 약 5%에 해당된다. 종전 후, 사망자의 유가족, 상이군인, 피폭자, 재일코리안, 재사할린 등의 재외코리안, 위안부들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당시의 한국정부는 미국의 압력으로 대일청구권을 포기하고, 개별청구권 문제도 해결되었다고 해석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기본조약은 체결되었지만, 이 때문에 식민지 청산의 기회는 사라졌고, 인도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큰 과제를 남기며 오늘날에 이르렀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본 요지집에는 게재되어 있지 않다.

6. 결론

한일국교정상화 기본조약이 식민지 지배의 청산에 있어 적절하게 기능하지 못했던 이유에는 일본의 한국에 대한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 미국이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그것을 일본은 교묘하게 이용한 측면이 크다. 여기에도 「미국 예외주의」의 부의 영향이 확인된다. 또한, 자위대의 창설 역시 미국에 의한 것이었는데, 이와 같은 문제는 「7·1 쿠데타」 이후, 해결의 실마리가 한층 곤란해졌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그것과는 별개의 곤란한 과제가 개입되어 있기 때문이며, 그것은 다름 아닌 일본에게 대량 플루토늄의 보유를 인정한 「미국 예외주의」라고 하는 뒤틀린 대미 종속을 추진해 온 전후 일본의 정치적 문제와 연동되어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동아시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일본·한국·중국의 삼국 연계가 중요하며, 지금도 여전히 예외주의의 입장을 고수하는 미국과는 거리를 두고, EU와 밀접하게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일본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한국·중국과의 신뢰 관계를 회복하는 데 노력해야 하며, 독일의 역사인식과 전쟁책임의 청산 방법을 모델로 해서 미국의 예외주의가 초래한 부의 역할과 함께 한일 교섭 과정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해야 한다.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시민들은 「7·1 쿠데타」에 의해서 발생한 수많은 「혈벗은 삶」을 「올바른 삶」으로 전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혈벗은 삶」은 일본 국내뿐 아니라, 외국 시민과의 연계를 폭력적으로 단절시켰으며, 또한 그것은 지금의 정치가 현저하게 보여 주고 있듯이, 「법적 쿠데타」에 의한 정의에 반하는 사태를 초래했다. 따라서 그것에 대항해서 평화헌법에 기초한 입헌정치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의 울타리 밖에서 겨우 연명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담당자이기도 한 시민들의 힘을 통해서, 국회 안에서도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일본 국민뿐 아니라, 한일 연구자를 비롯한 국외의 사람들과 학문적인 대화와 연계는 반드시 필수적이다.

【參考文獻】

- 岩波書店編集部編(2015)『私の「戦後70年談話」』
植村泰三(2012)「アメリカ例外主義に関する一考察—キリスト教とアメリカ史の視点から」『早稲田大学法学会編』87권 3호
岩崎稔・陳光興・吉見俊哉編(2011)『カルチュラル・スタディーズで読み解くアジア』せりか書房
内田雅敏(2015)『和解は可能か—日本政府の歴史認識を問う』岩波ブックレット
E. H. 카ー 著, 清水幾太郎 訳(1962)『歴史とは何か』岩波書店

- 河合克義・菅野道生・板倉香子編著(2013)『社会的孤立問題への挑戦 分析の視座と福祉実践』法律文化社
- 喜安朗・成田龍一・岩崎稔著(2012)『立ちすくむ歴史 E.H.カー『歴史とは何か』から50年』せりか書房
- 佐藤幸治(2015)『世界史の中の日本国憲法 立憲主義の史的展開を踏まえて』左右社
- Gayatri C. Spivak 著, 鈴木英明 訳(2011)『ナショナリズムと想像力』青土社
- 『世界』「特輯 1 「違憲」安保法案を廃案に」(2015.8)
- 樋口陽一(2015)『「日本国憲法」まっとうに議論するために[改訂新版]』みすず書房
- 牧野英二(2015)「希望の原理としての最高善」『日本カント研究』No.16, 日本カント協会, 知泉書館
- _____ (2013)『「持続可能性の哲学」への道—ポストコロニアル理性の批判と生の地平』法政大学出版局
- _____ (2014)『岩波人文書セレクション：カントを読む—ポストモダニズム以後の批判哲学』岩波書店
- 『朝日新聞 DIGITAL』(2015.7.28)
- 『東京新聞』「筆洗」(2011.11.4)
- 『日本経済新聞』電子版(2011.11.16)
- Aganben, Homo Sacer, Torino(1995)
- Arendt, Hannah(1958)The Human Condition, Chicago/London
- NHK NEWS web(2015.7.28)
- Report of the ICRC Expert Meeting on ‘Autonomous weapon systems: technical, military, legal and humanitarian aspects’, 26-28 March 2014, Geneva 9 May 2014
- The Wall Street Journal(2015.7.28)

논문투고일 : 2015년 09월 10일
심사개시일 : 2015년 09월 20일
1차 수정일 : 2015년 10월 08일
2차 수정일 : 2015년 10월 14일
게재확정일 : 2015년 10월 19일

<要旨>

「헐벗은 삶」과 정치의 붕괴

- 잃어버린 전후 70년, 그리고 50년 -

본고의 목적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다. 첫째, 제2차 세계대전 패전으로부터 일본은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취해 왔는가. 달리 말하자면, 전후 일본은 무엇을 상실했는가. 둘째, 전후 일본은 국제관계, 특히 한일국교정상화에 성공했는가. 달리 말하자면, 일본은 국제적·국내적으로 평화 실현에 노력하며, 법적 정의를 실현했는가. 셋째, 일본 사회에 살고 있는 시민은 「올바른 삶」(bios)을 향수했는가. 넷째, 현대 사회가 추진하고 있는 과학 기술은 국내외의 국민의 「올바른 삶」에 상응하는 「희망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가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상과 같은 질문에 대한 필자의 대답은 모두 부정적이다. 첫째로, 현재 일본에서는 평화헌법에 적합한 민주적인 정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민은 노력을 통해서 획득한 민주주의·입헌정치를 상실했다. 둘째로, 전후 70년,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이하면서 한일관계는 최악의 상황에 빠져 있다. 셋째로, 일본의 정치는 붕괴상태에 빠져 있고, 「헐벗은 삶」(zoe)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넷째로, 8월 14일의 수상 담화에 대한 평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일본은 미국을 예외로 국제적 불신감을 강화시키고 있고 동아시아로부터 고립당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정치의 붕괴를 막고, 국민이 상실한 것을 회복하며, 이웃 국가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을까.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고찰을 시도한다. 첫째로, 「7·1 쿠데타」 이후, 일본이 직면하고 있는 정치적 문제를 인간의 「삶」의 양의성과 관련해서 해독한다. 둘째로, 현대 정치의 붕괴와 그에 따라 발생한 「헐벗은 삶」의 여러 문제들을 밝히고자 한다. 셋째로, 필자는 「7·1 쿠데타」가 상징하는 일본의 「정치 붕괴」에 의해서 적나라하게 노출된 「헐벗은 삶」의 상황에 대해서, 정치의 본래 모습을 탐구하기 위한 「올바른 삶」의 의미를 규명한다. 넷째로, 「정치 붕괴」는 아베정권이 목표로 하는 분쟁의 해결 방법이 「자율형 무기」의 활용을 촉진시키고, 「7·1 쿠데타」의 최종 국면으로서 「헐벗은 삶」에 의한 인간의 「올바른 삶」을 위기에 노출시키는 리스크를 고찰한다. 마지막으로, 전후 정치의 붕괴에 가담한 「미국 예외주의」의 공죄를 지적하고, 바람직한 시대의 도래를 위한 방향성을 전망한다.

Bare Life and Political Collapse

- The Seven and Five Decades Lost after World War II -

This paper is intended to answer four particular questions. First, what has Japan learned and gained since its defeat in World War II, and what has it lost? Second, did Japan manage to establish favorable international relations in the postwar years, particularly in normalizing diplomatic relations with South Korea? To put it differently, has Japan made efforts to achieve peace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and realized legal justice? Third, does Japanese society enjoy a qualified life (the English term for the Greek bios)? Fourth, can the science and technology being promoted in Japanese society today guarantee a right to hope as appropriate for the qualified lives of people in Japan and beyond?

My answers to these questions are all negative. First, Japan today lacks the democratic governance needed to serve the purpose of its pacifist constitution. The Japanese people have lost democracy and state governance based on constitutionalism, which they had worked so tirelessly to realize. Second, Japan-South Korea relations plunged to a new low as Japan marked the 70th anniversary of the end of World War II and the 50th anniversary of the normalization of diplomatic relations with South Korea. Third, Japan's political scene is on the verge of collapse, exposing a state of bare life (the English term for the Greek zoe). Fourth, Japan has lost the trust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except the U.S.) as manifested by various countries' responses to Prime Minister Shinzo Abe's August 14 statement on the 70th anniversary of the end of World War II. The nation is increasingly isolating itself from others in East Asia. How can Japan avoid the road to political collapse, recover what its people have lost, and regain the confidence of neighboring countries?

This paper discusses these pressing issues. First, I will elucidate, in consideration of life's ambiguities, the political issues Japan has faced since the fundamental policy change of July 1, 2015, when the Shinzo Abe administration made a Cabinet decision to allow exercise of the right to collective defense. Second, I will discuss the pending collapse of today's politics and various aspects of the resulting bare life. Third, I will highlight the significance of a qualified life as a way of examining an ideal political world, as opposed to the state of bare life exposed by Japan's political malaise as symbolized by the fundamental policy change of July 1. Fourth, I will clarify how, under the influence of political collapse, the method of conflict resolution pursued by the Shinzo Abe administration will promote the use of autonomous weapons, and how the bare life concept could endanger qualified life as a consequence of the policy change. Lastly, I will outline the pros and cons of American exceptionalism, which played a part in Japan's postwar political collapse, and propose a direction to be taken toward a bright future.